

비상경제장관회의

23-19-1

(공개)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방안

2023. 8. 17.

관계부처합동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방안(요약)

I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 발굴

- ☐ 8월 현재 **후속대책 26건** 수립, 법·제도 등 **인프라 개선** 병행
- ☐ 통합정보 플랫폼, 브랜드 영상, 공모전 ⇨ **국민소통 강화·성과 확산**
 - 한눈에 15대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볼 수 있는 '新성장 4.0 통합정보 플랫폼' 가동('23.5월~)
 - 新성장 4.0 '브랜드 영상'을 서울역, 코엑스 전광판 등에 송출하고 추진단 유튜브에 게시(8월 기준 240만 조회)
 - * 영문버전도 제작하여 외국인 투자자 및 국제기구 등에 배포
 - 청년층의 정부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숏폼 공모전 추진중
- ☐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애로 발굴 ⇨ **현장으로 해소방안 마련**(7개 분야 14건)

II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방안

1. AI 반도체

- ①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 '응용실증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공공실증 지원 강화
 - * 국산 NPU 사용 데이터센터 구축: 공공('23~'24, 광주), 민간('23~'25, 판교 등)
 - ** ('22) 4건/41억원 → ('23) 8건/55억원
- ② AI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대상 시제품 생산지원 확대*
 - * 시스템반도체 기업환경 조성(MPW 등): ('22년) 56억원, ('23년) 64억원
 - 시스템반도체 IP뱅크 플랫폼 구축(IP): ('22년) 33억원(44건), ('23년) 50억원(67건)
- ③ 정부 R&D 사업자 선정시 국산 AI반도체를 사용하거나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가점부여 등을 통해 협업생태계 강화
 - AI반도체 관계기업간 협의체인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의 분과를 확대·강화*하여 신규·현장 협력과제 발굴 및 실증 추진
 - * (현행) 지능형관제, 메타버스·교육, 국방, 의료 → (확대) 드론, 로봇 등

2. 도심항공교통(UAM)

- ① 'UAM용 주파수 구축 TF'를 구성하여 안전한 UAM 운항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단계적 주파수 발굴·공급 추진
 - * 활용가능 주파수(LTE 또는 5G) 정의, UAM용 주파수 추가 발굴 등
- ② 'UAM 안전운영체계 핵심기술(R&D)' 예타('23.下)를 통해 항공 안전 및 보안 확보를 위한 UAM 교통관리체계 구축

3. 수소

- ① 청정수소 생산기술 조기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정수소 수전해 기술개발(R&D) 및 클러스터 구축(비R&D) 예타 추진
- ②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23.下~), 항만 설계기준 등 관련 규정에 안전기준 도입·신설(~'24)을 통해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 * 기업이 개발·실증 중인 신기술 청정수소 생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불합리 하거나 부재하여 기업의 설비투자 및 상용화에 애로 존재
- ③ 수소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수소사업자의 분류·역할 등을 규정하는 「수소사업법(가칭)*」 제정 검토
 - * 사업자분류(인허가 체계), 수급안정, 불법행위 규제 등 사업자 역할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수소 수급과 사업추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4. 자율주행

-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구역 내에서 비정형데이터(차량 번호·사람 얼굴이 포함된 영상 등)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준 완화**
 - * 개인식별과 관련없는 연구·실증 목적, 인적개입 원천차단, 주기적 점검 및 안전성 평가 등
 - **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을 위한 실증연구 추진('23.下~)
- 규제 샌드박스 구역 외에서도 가명처리된 영상데이터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 * 가명처리 원칙, 식별 위험성 점검기준, 가명처리 방법 등 포함

5. 배터리

- ① 식별번호 부여 등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토대로 배터리 독자유통기반을 구축하고, 배터리 소유권 분리·등록 방안도 마련

* 자동차관리법 개정 완료('23.8)

- ②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초안(9月) 논의 등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조기 구축*

* '21년 이후 출시 전기차는 배터리의 지자체 반납의무가 없어 향후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가 주요 이슈로 부각

○ 전기차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연계

- ③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를 통해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있는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조기지정 추진(금년중)

* 사용후 배터리 순환자원 지정범위 결정 및 고시('23.下)

6. 의료 마이데이터

-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범위 등 세부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에 조속히 구체화하여 바이오·헬스 신산업 창출 지원

* 「개인정보보호법」개정('23.3월)으로 개인 의료정보의 민간 전송(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법적근거는 旣마련

7. R&D 연구장비 도입 절차 간소화

- 연구 장비·시설 심의제도를 개선하여 신속한 장비 도입 및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 추진('23.下)

①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기간 단축(現40일→25일)

② 심의변경 대상인(금액, 사양변경 등) 장비의 변경사유에 필요한 항목(부합성, 활용성, 적정성)만 평가하여 변경심의 간소화

👉 **新성장 4.0 프로젝트별 민관협의체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애로 및 신규과제 발굴 지속→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장애요인 해결, 체감성과 창출**

기업 수출·투자현장 규제혁신 방안(요약)

I 추진배경

- 최근 경기회복 흐름이 확인*되는 가운데 정부는 수출·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 대응 중

* 전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최근 2개월 연속 증가

**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도 제고,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설투자자금 확대 등

- 정책효과가 그림자 규제 등으로 저하되지 않도록 기업 수출·투자현장의 애로를 발굴하여 신속히 해소할 필요

⇒ 경제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기업·지자체·경제단체 등과 소통하면서 7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등 규제 개선

II 주요 특징

- ①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 민간 투자 7.2조원+a 지원

- 과도한 규제, 제도 미비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거나 불확실성이 큰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 해소

규제혁신 과제	투자 기대효과
① 액화수소 플랜트 및 선박생산 관련 시험특례 적용	1조원
② 바이오매스 사용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대상 업종 확대	8,000억원
③ 철도 인근 유희부지 수소충전소 설치 안전기준 마련	500억원
④ 충북 오송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4조원 + a
⑤ 세종·대전시내 드론 비행구역 확대	40억원
⑥ 지자체 입주협약 기업에 부지공급 수의계약 허용	1.3조원
⑦ 곤충 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200억원
합 계	7.2조원 + a

- ② 지자체 역점사업 지원, 지역소재 기업 애로 해소 → 지역경제 활성화

- 액화수소 플랜트·선박 가동 지원,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으로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인력고용, 허가·심사 개선 등을 통해 지역기업 애로 해소

- ③ 규제 체감도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노력 지속

- 주요 경제단체, 협·단체, 기업 간담회 등 민간·현장과 소통하면서 규제개선 과제 발굴·개선 노력 지속

Ⅲ 분야별 규제혁신 과제

◇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바이오·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 산단 등 입지 애로 해소 등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추진

1 액화수소 등 친환경에너지 확산 기반 강화

- ① 국내 시험장치 구축('25년) 전까지 안전밸브 성능시험*의 임시 안전 기준을 마련(액화질소 허용)하여 액화수소 플랜트·선박 등 투자 지원 (현장대기 프로젝트)

* 우리나라는 성능시험 유체로 수소(끓는점: -253℃), 헬륨(-269℃)만 허용하나, 미국과 유럽은 질소(-196℃)도 허용

- ②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CO₂ 배출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외하는 업종 확대 (철강·석유화학 → 정유 추가) (현장대기 프로젝트)

- ③ 철도 인근 부지 수소충전 실증(~'25.12월)을 통해 기존에 불명확했던 철도 근접 수소충전소에 대한 별도 안전기준 마련 (현장대기 프로젝트)

- ④ 제3자 PPA 거래과정에서 거래당사자(발전사업자·전기사용자)간 합의를 통해 발생한 초과전력에 대해 시장거래를 허용하는 방안 마련

- ⑤ 내연기관차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하이브리드 택시에 대한 유형(중형·고급 등) 구분기준 현행화

2 바이오, 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① 충북 오송 일대 농지를 활용하여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등 대규모의 바이오융복합 산단* 조성 (현장대기 프로젝트)

* 산학연병 융합을 통한 K-바이오 스퀘어 사업 추진

- ② 대전시 한국원자력연구소 주변 비행금지 구역(現 반경 19km)을 항공선진국 수준(5km 내외)에 맞추어 조정 → 세종·대전 시내 드론 비행구역 확대 (현장대기 프로젝트)

- ③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세부 안전기준(중량·폭·속도) 마련

* 현행 제도상 전기자전거는 일반용과 화물용 미구분 / 무게(30kg 미만)·폭(700mm 이내) 제한으로 화물용 활용 곤란(주요국 화물용 전기자전거 중량제한은 300kg 이상)

3 산단 등 입지규제 개선

- 1 일반산단에 수의계약을 통해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범위 확대*
(현장대기 프로젝트)

* (현행)산단 지정권자(광역지자체+인구 50만명이상 기초지자체)와 입주협약 체결기업
→ (개선)산단 사업시행자인 기초지자체와 입주협약 체결기업도 포함

- 2 곤충가공업의 원재료로써 곤충을 생산하는 경우, 곤충가공업의
부대시설로 보아 산업단지 입주 허용 (현장대기 프로젝트)

* 현재는 곤충 가공유통업과 달리 곤충 생산업은 축산업으로 분류되어 단지내 입주 불가

4 기술인력 채용, 신고·등록 등 관련 기업부담 완화

- 1 가축분뇨 처리업무를 대행계약을 한 경우, 처리업 허가시 필요한
기술인력 의무고용(3명)을 면제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을
실무경력, 교육 이수 등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2 케이블TV, 위성방송사업 허가시 과기부 허가심사와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를 일원화하여 심사절차 간소화

5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 1 카페 등 음식점 내에서 반려동물 동반 이용 허용

* 現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접객업 영업장은 동물 출입이 가능한 공간과 분리 필요

- 2 지자체가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장애인 생산품목(現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공공기관(장애인생산품) 기준에 맞도록 확대

6 기업의 수출현장 애로 해소

- 1 수출바우처 서비스 범위(무역보험·보증 추가) 및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2 수출·수주시 해외바이어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부포상 및
실적증명서 영문화

순 서

[Part1.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방안]

I.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 발굴	1
II.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방안	2
III. 향후 추진계획	14

[Part2. 기업 수출·투자현장 규제혁신 방안]

I. 추진 배경	17
II. 주요 특징	18
III. 분야별 규제혁신 과제	19
IV. 향후계획	31

【PART 1】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방안

I.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 발굴

① 현재까지 26건 후속대책 수립, 법·제도 등 인프라 개선 병행

- '23년 8월 현재 총 26건의 「新성장 4.0 전략」 후속대책*을 수립하는 등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중**

*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 전략,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국가양자비전 등

** 누리호 3차 발사, 국산 AI반도체 데이터센터 구축,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 인프라 개선*도 병행

* 6건 법률 제·개정, 세액공제 확대, 양자암호통신 보안검증제도 도입 등

② 통합정보 플랫폼, 브랜드 영상, 공모전 ⇨ 국민소통 강화·성과 확산

- 한눈에 15대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볼 수 있는 「新성장 4.0 통합정보 플랫폼」 가동('23.5월~)하여 국민소통 강화·성과 확산
- 新성장 4.0이 가져올 미래 변화를 담은 '브랜드 영상'을 서울역, 코엑스 등에 송출하고, 추진단 유튜브에 게시(8월 기준 240만 조회)
 - '브랜드 영상' 영문버전을 외국인 투자자 및 국제기구 등에 배포
- 대학생 등 청년층의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新성장 4.0 솜품 공모전」 추진중

통합정보 플랫폼



브랜드 영상



솜품 공모전



③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애로 발굴 ⇨ 1차 현장애로 해소방안 마련

- 産學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民官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규제 등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
- 1차로 발굴한 애로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비상경제 장관회의 상정 등 신속 해소 추진 ⇨ 체감성과 창출 노력

Ⅱ.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방안

- ◇ 그간 민관협업체 등을 통해 주요 프로젝트 현장애로 발굴 노력,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1차로 7개 분야 14건 해소방안 마련
- ☞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하반기 중 성과 창출 노력

1. AI 반도체

① 국산 AI반도체의 공공실증 기회 확대 (과기부)

- (현장애로) 국내기업들은 호환성·안정성이 입증된 외산 AI반도체 선호 → 실증을 통한 국산 AI반도체 성능 실적 확보가 관건

- ▶ A社 성공적인 이력 없이 서버용 반도체 시장 진입 불가
- ▶ B社 美 연구기관 등은 다양한 주제로 스타트업의 소규모 실증 지원중

- (해소방안) 서버용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신속히 구축하여 팹리스 및 서비스 기업의 실증기반 마련

* 국산 NPU 사용 데이터센터 구축: 공공('23~'24, 광주), 민간('23~'25, 판교 등)

- 'AI반도체 응용실증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서버용·엣지용(로봇 등) AI반도체 공공실증 지원 강화**

* 국산 AI반도체(서버용, 엣지용)에 다양한 AI서비스를 적용하고, 기능·성능 등 테스트를 통해 AI반도체 실증 지원 / ('22년) 4건/41억원, ('23년) 8건/55억원

- ** ① 실증과제 확대(안전·관제, 보건·의료 등 6개 → '24년 로봇, 드론 등 신규 5개 추가),
② K-클라우드를 활용한 AI 디지털교과서 구축사업 본격 추진(교육부, 과기부)

【조치 사항】 ①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신속 구축('23~'25)
② K-클라우드를 활용한 AI반도체 실증 확대('24~)

② 스타트업의 시제품 생산 지원 확대 (산업부·기재부)

- (현장애로) 파운드리 시제품 생산비용도 스타트업 위주 국내 AI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 ▶ A社 팹리스 설계는 맞춤형 소량생산에 초점, 시제품 제작 비용 부담

- **(해소방안)** 초기비용 완화를 위해 AI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대상 시제품 생산 지원사업*을 확대('24~)

* 시스템반도체 기업환경 조성(MPW 등): ('22년) 56억원, ('23년) 64억원
시스템반도체 IP뱅크 플랫폼 구축(IP): ('22년) 33억원(44건), ('23년) 50억원(67건)

〈 [참고] 시스템 반도체 시제품 생산 지원사업 개요 〉

- ▶ (MPW, Multi-Project Wafer) 한 웨이퍼에 다수 연구개발용 칩을 올려 제작
- ▶ (IP, Intellectual Property) 반도체 칩 설계시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기능들을 회로로 구현한 설계 블록으로 Silicon IP, Design IP로도 칭함

【 조치 사항 】 시스템 반도체 시제품 생산 지원사업 확대('24~)

3 AI반도체 산업간 협업 생태계 조성·강화 (과기부)

- **(현장애로)** AI반도체 초기 설계단계부터 수요기업(클라우드 등)과 제휴를 통해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고 설계·최적화에 반영 필요

- ▶ B社 네이버·카카오 등 韓 대형 플랫폼과의 협업은 성공적인 해외진출에 큰 영향
- ▶ 학계 관계자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 및 우수한 IT인프라 등으로 AI반도체(팹리스) - 파운드리(반도체 제조공정) - AI서비스(클라우드, 초거대 AI모델 등)의 AI반도체 가치사슬 구축에 유리한 환경

- **(해소방안)** 수요기업과 협업기회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AI) R&D 사업자 선정 시 컨소시엄 및 국산 AI반도체 활용에 가점부여

- AI반도체 관계기업간 협의체인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의 분과를 확대·강화*하여 신규·현장 협력과제 발굴 및 실증 추진

* (현행) 지능형 관제, 메타버스·교육, 국방, 의료 → (확대) 드론, 로봇 등

〈 [참고]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사업 개요 〉

- ▶ (K-클라우드 프로젝트) 고성능·저전력 국산 AI반도체를 개발, 이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글로벌 진출까지 목표하는 사업
- ▶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 K-클라우드 추진을 위한 민·관 협업 창구 및 주요 과제 발굴을 위해 AI반도체·클라우드·AI서비스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 조치 사항 】 ① 정부R&D 컨소시엄 및 국산 AI반도체 활용 가점 부여('24~), ②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 분과 추가 운영·강화('23.下)

참고 1

AI반도체 산업 현황 및 전망

□ 美 엔비디아가 글로벌시장 95% 점유, 한국은 스타트업 위주 투자 시작

- ①엔비디아(美)가 AI반도체 점유율 95%로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②빅테크들은 자사 AI반도체를 직접 개발*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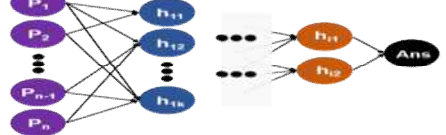
* 아마존(Inferentia), 마이크로소프트(Brainwave), 구글클라우드(TPU) 등

-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세계 점유율 59%)으로, 시장규모가 2배 이상인 **非메모리 분야는 열위**(점유율 3%, '21년 기준, Gartner)

- 최근 스타트업 위주로 국산 AI반도체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데이터센터 실증, 업체간 제휴 등 관련 산업 확대 중*

* (서버형 AI반도체) 국내 3개사 서버용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 구축·서비스 실증 추진 중
(엣지형 AI반도체) A社 로봇플랫폼용 AI반도체로 B·C社와 업무협약

인공지능 반도체 개념

구분	기존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기능	 <p>범용 목적 (단순한 인지 수준으로 제약)</p>	 <p>인공지능 최적화 (복잡한 상황 인식·판단 등 가능)</p>
기술 특징	<p>데이터를 프로그램대로 순차적 처리</p> 	<p>대량의 데이터를 동시(병렬) 처리</p> 

□ ChatGPT 영향으로 급속 성장 전망 ⇨ 기술패권 · 경제안보의 중심

- ChatGPT 등 AI가 일상으로 확산되며 AI반도체 시장은 '26년 861억불로 연평균 16% 급성장 전망(Gartner, 2022)

* AI반도체 시장규모(억불): ('21)348 → ('22)444 → ('23)553 → ('24)667 → ('25)760 → ('26)861

- 美·中 등 주요국들은 AI반도체가 향후 글로벌 기술패권과 경제안보의 중심이라고 인식, 투자·지원을 확대 중

* 미국은 對중국 AI반도체 수출규제 시행 등 국내산업 지원 강화('22.8.26일), 중국도 AI·반도체 중심으로 기술 우선순위 재편(월스트리트저널, '23.3)

2. 도심항공교통(UAM)

① UAM 전용 통신망(5G 등) 배정 추진 (국토부·과기부)

- (현장애로) 지상망과 간섭이 없는 UAM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도심 상공(300~600m)에서 UAM 전용 주파수 공급 필요
- 세계 각국이 LTE 등 여러 대역을 실증 중이나 아직 국제표준은 부재 → 조속한 실증·상용화를 통한 국제표준 선점 필요

- ▶ A社 한국형 그랜드챌린지 참여 위해 고흥에 5G 통신망 20억원 규모 투자
- ▶ 항우연 우리나라 통신망은 세계적으로 우위, 美 NASA도 MOU 등 큰 관심

- (해소방안) 관계부처 합동 UAM용 주파수 구축 TF 출범('23.3Q)
- 무중단 항공 안전 확보, 보안(해킹·테러방지 등) 강화를 위한 5G망 등 단계적* UAM 전용 주파수 발굴·공급 추진**

* UAM 기술개발 계획 : 저밀도 UAM 교통관리용 감시정보(CNSi) 활용·체계 기술개발 R&D('22~'25년) → '24년 수도권 실증('24.8~) → 초기 상용화('25~'29년)

** 활용가능 주파수(기존 또는 5G) 정의, UAM용 주파수 추가 발굴 등

【조치 사항】 관계부처 합동 UAM용 주파수 구축 TF 출범('23.3Q)

② UAM 교통관리체계 구축 (국토부·과기부)

- (현장애로) UAM 산업은 인프라 및 연관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부가가치를 창출* → 선제적 시스템 운영체계 구축 필요

* 국제 UAM 시장(%): 교통관리(75), 버티포트 등 인프라(15.5), 기체(9.5)

- (해소방안) R&D 예타('23.下)를 거쳐 항공안전 및 보안이 확보된 「UAM 교통관리체계」 구축 추진

【조치 사항】 「UAM 안전운영체계 핵심기술(R&D)」 예타 추진('23.下~)

참고 2

도심항공교통(UAM) 산업현황 및 전망

□ 새로운 형태의 전기동력 항공기 ⇨ 미래 항공산업의 돌파구

- 美우버社가 사업모델 첫 제시('19) 후 '22년 현재 기체제작에만 300개 이상 업체들이 도전하는 등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 중
- UAM 산업(기체·인프라·서비스 등) 시장규모는 '40년 731조원 (세계시장, 집현컨설팅 / 국내는 13조원)으로 급성장* 예상(연평균 31%)
- 현대차·한화(기체), 대한항공·제주항공(운항), 한국·인천공사(인프라), SKT·LG(서비스·플랫폼) 등 우리 기업도 도전적으로 시장 진출 중

□ '25년 서울도심 속 UAM 비행을 위한 사전준비 ⇨ 「그랜드챌린지」

- 우선 비도심지역 실증('23.8월말~) 후 도심지역에서 실증('24.10월~) 진행 계획, 현재 비도심지역(전남 고흥)에 인프라 구축 중(그랜드챌린지, '23~)



⇨ 기체인증, 운항서비스, 교통관리, 버티포트(이착륙장) 운영 등 UAM 운항에 필요한 주요소 통합운용 능력 확인(전세계 경합의 場)

* (통합운영) 7개 컨소시엄 35개 기관 / (단일분야) 기체·교통관리 11개 기관

□ 안전성 확보 및 미래 모빌리티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반구축

- (법·제도) 원활한 실증사업 추진 위해 기존 항공법규에 대한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담은 UAM 법 제정 추진('23.6 국회 상임위 통과)
- (기술개발) '25년 초기 상용화 이후 본격적인 성장기('30~)에 대비한 안전운영체계 핵심기술 R&D 추진('23.4, 신속 예타대상 선정)

3. 수소

① 청정수소 R&D 확대 및 클러스터 구축 추진 (산업부)

- (현장애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수소 수전해 생산기술 확보가 중요 → 리스크·기술격차*를 고려하여 민관 역량 결집 필요

* 선도국 대비 기술격차: 그린수소 5~7년, 블루수소 4년('21, H2KOREA)

▶ A社 수전해 실증은 리스크가 커 정부 지원이 필수적

- (해소방안) 생산기술 조기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정수소 수전해 생산 기술개발 및 클러스터 구축 예타 기획·추진

【조치 사항】 청정수소 수전해 생산 기술개발 및 클러스터 구축 예타 기획·추진('23.下)

②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 (산업부·환경부·해수부)

- (현장애로) 기업이 개발·실증 중인 신기술 청정수소 생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부재하여 상용화에 어려움

* (예) 대용량 현장설치형 수전해 설비,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등

- (해소방안) 신기술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23.下~), 항만 설계기준 등 관련규정에 안전기준도 도입·신설(~'24)

【조치 사항】 관련 법률·규정 개정 추진('23.下~)

③ 수소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산업부)

- (현장애로) 현재 수소산업 관련 민간 사업자 자격, 역할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민간의 시장 참여를 저해

▶ B社 現 「수소경제법」은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의 진흥역할에 초점을 맞춘 법, 사업자들의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한계

- (해소방안) 수소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수소사업자의 분류·역할 등을 규정하는 「수소사업법(가칭)*」 제정 검토

* 사업자분류(인허가 체계), 수급안정, 불법행위 규제 등 사업자 역할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수소 수급과 사업추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조치 사항】 「수소사업법(가칭)」 제정안 마련('23.下)

참고 3

국내 수소산업 현황

- 수소차, 충전소 등 수소 수송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최근 러우전쟁에 따른 수소가격 상승 등으로 사업환경 악화
 - 그간 부생수소 기반 수소차, 충전소 및 발전용(연료전지) 육성 및 세계 최초 「수소경제법」 제정('20.2) 통한 체계적 지원 추진
 - * '18년 대비 수소차 보급 17배, 충전기 설치 8배, 연료전지 발전규모 2배
 - ↳ '22.12월 기준, 수소전기차,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세계 1위
 - ⇒ 대규모 생산기지(울산 등)에 편중된 수소 공급망(지역별 편차↑)¹⁾, 최근 러우전쟁 이후 천연가스 가격상승(수소가격↑)²⁾ 등 여건 악화
 - 1) 지역별 수소 충전요금('23.8월 기준) : 울산 8,500원/kg vs. 경기 10,400원/kg
 - 2) 천연가스 선물 가격(USD/MMBtu): 3.73('21.12.1) → 4.475('22.12.1)
- 최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청정수소 생산·발전이 각광 ⇒ 초기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 격화
 - 경쟁국들은 청정수소 대량생산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수출국(濠, 남미 등)-활용국(EU, 日 등) 간 협력 확대** 추진
 - * 美 청정수소생산 세액공제, 英 청정수소 제조자금 지원, 수소펀드 조성 등
 - ** 액화수소 운반선 실증(濠→日, '22.2), 파이프라인 설치 추진(노르웨이→獨, '22.3) 등
 - 우리는 대기업 중심으로 청정수소 생산·활용 위한 투자 진행
 - * SK(생산), POSCO(수소환원제철), 한화(저장), 롯데Chemical(생산) 등 50조원 예상 (~'30년), 수전해 기술에 대한 투자규모는 '19년 대비 '20년 2배 이상 증가
 - ⇒ 다만, 청정수소 생산기술은 선진국과 4~7년 기술격차 존재
 - * 선도국 대비 기술격차: 그린수소 5~7년, 블루수소 4년('21, H2KOREA)
- 수송용 → 발전용 → 산업용으로 이어지는 수소생태계 고도화 필요
 - (활용) 승용차·연료전지 위주에서 수소의 장점*을 활용한 대형 상용차(버스, 트럭), 대형발전(가스터빈), 산업계(수소환원제철)로 확대
 - * 온실가스 감축, 전기차 대비 고중량 적재 및 장거리 주행 등
 - (유통) 액화수소 수송 및 수소·암모니아 발전용 인프라 마련
 - * 기체튜브 고압화(現 200 → '30년 700기압), 액화 트레일러 개발('30년 3ton) 등
 - (생산)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반 확충, 해외 경제성 높은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으로 그레이수소에서 청정수소 생태계로 전환
 - * 수전해시스템 용량확대(現 1 → '30년 10MW ↑), 해외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 시범사업('23~'26년)

4. 자율주행

□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활용 개선방안 마련 (개보위·산업부·국토부)

- (현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로 인해 자율주행 안전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실주행 데이터 확보 및 실증에 한계

- ▶ A社 미국 등은 판매차량에서 촬영한 영상을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 중
- ▶ B社 익명·가명처리된 영상데이터를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활용할 경우 실제 주행시 오류발생 가능성 → 기술격차 해소 곤란 및 경쟁력 약화 우려

〈 [참고] 자율주행차 실주행 데이터 활용 현황 〉

- ▶ (미국, EU)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명처리 후 연구개발 활용 원칙
 - ※ 단, 미국의 경우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연구개발 현장에서 가명처리를 엄격히 이행하지 않으며, 실제 피해발생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
- ▶ (우리나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가명처리 후 연구개발 활용 원칙
 -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3.3.14.)으로 자율주행차 등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旣마련하였으나, 연구목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은 없는 상황

- (해소방안) 상반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3.3)으로 자율주행차 등이 촬영한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旣마련

- 안전조치*를 전제로 자율주행 비정형데이터(차량번호·사람 얼굴이 포함된 영상 등)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

* 개인식별과 관련없는 연구실증 목적, 인적개입 원천차단, 주기적 점검 및 안전성 평가 등

- 규제샌드박스 특례 지구 외에서도 자율주행 영상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원칙, 식별 위험성 점검기준, 가명처리 방법 및 사례 등 포함

- ** (익명처리)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가명처리) 일부 삭제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 조치 사항 】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을 위한 실증연구 추진('23.下~)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23.下)

참고 4

국내·외 자율주행차 산업 현황

-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은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현대기아차 등 국내 대기업은 레벨3 승용차 출시 준비 중

◆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 도로정보 등을 자체적으로 인지·판단하여 스스로 운행하는 자동차, 기술수준에 따라 6단계로 구분

레벨 구분	부분 자율차			완전자율차		
	Lv.0	Lv.1	Lv.2	Lv.3	Lv.4	Lv.5
명 칭	無 자율주행 (No Automation)	운전자 지원 (Driver Assistance)	부분 자동화 (Partial Automation)	조건부 자동화 (Conditional Automation)	고도 자동화 (High Automation)	완전 자동화 (Full Automation)
운전주시	항시 필수	항시 필수	항시 필수 (조향·제동·가속을 보조할 수 있음)	시스템 요청시 (조향·제동·가속을 필요 X,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	작동구간 내 불필요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	전 구간 불필요

※ 사고 발생시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레벨3부터 자율차로 분류

- 글로벌 완성차 기업은 레벨3 자율주행차를 既출시*, 국내 업체도 북미시장을 겨냥한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계획중

* 다만, 공공용 차량 등으로 제한적 판매실적 / (A社)자국내 공공기관에 10대 판매, (B社) 자율주행 연구기관 및 관련기관에 판매(100대)

- 국내 스타트업은 공공용 특수목적 차량시장을 타겟으로 개발중

-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 고속주행 승용차 대신 저속의 무인 셔틀, 청소차 등 특수목적 차량 위주로 실증 연구 진행
- 또한 스타트업은 높은 자율주행차 단가에 따른 시장성의 한계로 공공기관 대상 판매시장(공공조달 시장 등)을 타겟화

- 정부는 Lv.4 차량 기준 최고 기술 대비 90% 이상, 국민신뢰도 80% 이상을 목표로 제도 개선 및 R&D 연구개발 지원

* 현재 자율주행 기술수준: 미국(100), 유럽(99), 중국(92), 일본(88), 한국(85)

- ① (규제특례) 자율주행 서비스 위해 시범지구(24개) 내에서 안전 기준 면제·유상운송 허가 등을 허용('20.11~)

* 여객·화물 유상운송, 안전기준 일부면제, 특수목적 차량의 도로보수 허용 등

- ② (연구개발) 차량·인프라·통신 등 제반환경에 대한 범부처 R&D(국토·산업·과기·경찰, ~'27년, 1.1조원) 지원, K-City* 고도화

* 자동차안전연구원(화성) 내 36만m² 규모로 도심환경을 재현한 테스트베드

5. 배터리

①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방안 마련 (국토부)

- **(현장애로)** 우리나라는 전기차 배터리의 독자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구독서비스·재활용 등 신산업 창출에 한계

* 현행 법령체계는 전기차 배터리를 자동차 부품으로 간주

▶ A社 정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배터리 리스 사실 명시를 허용하였으나, 배터리 임대 업체가 이를 근거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어 실질적 운용에 한계

- **(해소방안)**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토대로 배터리 독자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배터리 소유권 분리·등록 방안도 마련

* 자동차관리법 개정 완료('23.8)

【조치 사항】 배터리 소유권 분리·등록 방안마련 착수('23.下~)

②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 수립 (기재부·환경부·산업부·국토부)

- **(현장애로)** '21년 이후 출시 전기차는 배터리의 지자체 반납 의무가 없어* 향후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가 주요 이슈로 부각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전기차 배터리 반납의무 폐지('23.5월 기준, 32만대)

- **(해소방안)**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초안(9월) 논의 등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조기 구축

- 전기차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연계

【조치 사항】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수립('23.下)

③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자원 지정 (환경부·산업부)

- **(현장애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해외수입 등을 통한 선제적인 원료 공급원 확보 필요

- 우리나라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분류하여 해외 수입 및 재제조·재사용 등에 제약

▶ B社 배터리 스크랩은 지정폐기물로 해외(유럽)에서 수입시 허가 필요

- **(해소방안)**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를 통해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있는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조기지정 추진(금년 중)

【조치 사항】 사용후 배터리 순환자원 지정범위 결정 및 고시('23.下)

참고 5

국내 배터리 산업 현황

- 산업동력에 해당하는 배터리 분야에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전기차 배터리 시장점유율 1위*('22년, 중국시장 제외)

* 자국중심의 중국시장 제외(%) : 韓53.4, 中27.4, 日18.5 (*中 포함: 中64.9, 韓23.7, 日8.1)

- 고급형 배터리인 삼원계(니켈+코발트+망간) 제조기술은 최고 수준, 장비 부문도 국산화율 90% 이상 달성
 - 가격을 낮추고 효율을 높인 하이니켈 양극재(니켈함량 95%이상)와 전고한 비닐재질의 파우치형 폼팩터 기술도 독보적

- 주요 광물자원 매장국과의 양자협력을 통한 자원 확보 및 신속한 친환경 제정련 가공공법 개발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

* 주요광물 매장국: (리튬) 호주, 남미 3국, (니켈) 인도네시아, (코발트) 콩고

- 하이니켈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등 삼원계 배터리 고도화 및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가 중요
- 중국 주력품인 보급형 배터리(LEP, 인산철)도 주행거리 등 성능 개선이 진행 중으로 시장수요별 맞춤형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

<참고. 주요 배터리별 특징>

구분	삼원계	인산철	비고 (삼원계 VS 인산철)
강 점	에너지 밀도 ↑, 주행거리 ↑, 중량 ↓	안정성 ↑, 가격 ↓	- 주행거리: 500km vs 300km

- 현재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초기인 점을 감안 향후 배터리 재활용 업체들의 역량*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중요

*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회수율 향상, 추출 가능한 원료의 종류 확대 등

- 국내 전기차 등록 현황*과 보관가능량**을 고려하면 '30년 이후에는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 증가와 관리 문제 대두 예상

* 연도별 전기차 신규등록(대): '17년 14,253 → '20년 45,034 → '22년 158,412

** 국내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에 배터리 팩 4,853개 보관 가능

6. 의료 마이데이터

☐ 개인 의료정보의 민간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개보위·복지부)

- (현장애로) 데이터를 모으는 것 만큼 민간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활용하여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

*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주도적으로 활용(건강관리 등)하는 제도

▶ A社 데이터 제3자 개방이 관건,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조속한 개방 필요

- (해소방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3.3월)으로 개인 의료정보의 민간 전송(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전송 정보범위, 수신자 기준, 전송방법 등 구체적 내용을 조속히 확정하여 하위법령 정비('24년)

* 의료계·산업계·시민단체 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전송 데이터 항목 등 기준 결정

- 개인 의료정보의 제3자 전송 확대를 통해 불필요한 서류 발급없는 진료 서비스를 구현하는 등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조치 사항】 의료정보 제3자 전송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24)

7. R&D 연구장비 도입 절차 개선

☐ 연구 장비·시설 도입 심의 절차 간소화 (과기부)

- (현장애로) 현재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장비·인프라 구축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적시성 있는 연구개발에 한계

- (해소방안) 신속한 장비 도입 및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 등을 위해 연구 장비·시설 심의제도 개선 추진

①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기간 단축(現40일 → 25일)

② 심의변경 대상인(금액, 사양변경 등) 장비의 변경사유에 필요한 항목(부합성, 활용성, 적정성)만 평가하여 변경심의 간소화

【조치 사항】 연구 장비·시설 심의제도 개선('23.下)

👉 **新성장 4.0 프로젝트별 민관협의체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애로 및 신규과제 발굴 지속 →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장애요인 해결, 체감성과 창출**

Ⅲ. 향후 추진계획

1. AI 반도체

조치 사항	추진 시기	소관부처
■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신축 구축	'23~ '25	과기정통부
■ K-클라우드를 활용한 AI반도체 실증 확대	'24~	과기정통부
■ 시스템 반도체 시제품 생산 지원사업 확대	'24~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 R&D 사업자 선정 시 기업간 컨소시엄 및 국산 AI반도체 활용 연구기관에 가점 부여	'24~	과기정통부
■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 분과 운영.강화	'23.下	과기정통부

2. 도심항공교통(UAM)

조치 사항	추진 시기	소관부처
■ 관계부처 합동 UAM용 주파수 구축 TF 출범	'23.3Q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 UAM 안전운영체계 핵심기술(R&D) 예타 추진	'23.8~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3. 수소

조치 사항	추진 시기	소관부처
■ 청정수소 수전해 생산 기술개발 및 클러스터 구축 예타 기획·추진	'23.下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 수소 안전기술 관련 법률규정 개정 추진	'23.下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 「수소사업법(가칭)」 제정안 마련	'23.下	산업통상자원부

4. 자율주행

조치 사항	추진 시기	소관부처
■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을 위한 실증연구 추진	'23.下~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23.下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 배터리

조치 사항	추진 시기	소관부처
■ 배터리 소유권 분리·등록 방안마련 착수	'23.下~	국토교통부
■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수립	'23.下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사용후 배터리 순환자원 지정범위 결정 및 고시	'23.下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6. 의료 마이데이터

조치 사항	추진 시기	소관부처
■ 의료정보 제3자 전송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하위법령 정비	'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7. R&D 절차 개선

조치 사항	추진 시기	소관부처
■ 연구 장비·시설 장비 도입 심의제도 개선	'23.下	과기정통부

【PART 2】

기업 수출 · 투자현장 규제혁신 방안

I. 추진 배경

- 최근 경기회복 흐름이 확인*되는 가운데 정부는 수출·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 대응 중

* 전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최근 2개월 연속 증가

전산업 생산(전월비, %): ('22.10)△0.9 (11)△0.5 (12)0.0 ('23.1)△0.2 (2)1.1 (3)1.1 (4)△1.3 (5)1.1 (6)0.1

소매판매(전월비, %): ('22.10)1.0 (11)△2.9 (12)0.6 ('23.1)△1.8 (2)5.2 (3)0.1 (4)△2.6 (5)0.4 (6)1.0

설비투자(전월비, %): ('22.10)0.1 (11)0.3 (12)△6.1 ('23.1)△4.9 (2)1.2 (3)△2.5 (4)0.8 (5)3.5 (6)0.2

**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도 제고,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설투자자금 확대 등

- 하지만 정부의 노력이 기업의 투자증대로 이어지는데 각종 규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여 정책효과 약화 우려

- 산단 등 입지규제, 안전기준 미비 등으로 투자 집행에 애로
- 또한, 전문인력 채용 의무, 허가·신고 등 관련 복잡한 절차 등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

- 정책효과가 그림자 규제 등으로 저하되지 않도록 기업 투자 현장의 애로를 발굴하여 신속히 해소할 필요

⇒ 경제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기업·지자체·경제단체 등과 소통하면서 7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등 규제 개선

【 기업 수출·투자 현장규제 혁신 추진 경과 】

- 기재부·행안부 공동으로 지자체 역점 추진사업과 지역기업의 애로 등을 집중 발굴·개선 추진

- 기업 현장방문, 지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한 소관부처 검토 및 쟁점조정 진행 → 금번 기업 투자현장 규제혁신 방안에서 개선방안이 도출된 26개 과제 발표
- 잔여과제 또한 행안부·기재부 공동*으로 신속한 쟁점조정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속 발표할 예정

* 지방규제혁신회의 등을 통해 지자체 역점사업 또는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추가 발굴하고 행안부·기재부 공동 쟁점조정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예정

II. 주요 특징

◇ 기업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한 투자활력 제고, 기업 경영활동 지원 등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추진

①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 민간 투자 7.2조원 + α 지원

- 과도한 규제, 제도 미비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거나 불확실성이 큰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 해소

<주요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규제혁신 과제	투자 기대효과
① 액화수소 플랜트 및 선박생산 관련 시험특례 적용	1조원
② 바이오매스 사용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대상 업종 확대	8,000억원
③ 철도 인근 유희부지 수소충전소 설치 안전기준 마련	500억원
④ 충북 오송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4조원 + α
⑤ 세종·대전시내 드론 비행구역 확대	40억원
⑥ 지자체 입주협약 기업에 부지공급 수의계약 허용	1.3조원
⑦ 곤충 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200억원
합 계	7.2조원 + α

② 지자체 역점사업 지원, 지역소재 기업 애로 해소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기업의 전문인력 고용, 허가심사 등 관련한 애로를 해소하여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비용부담 절감을 지원
- 액화수소 플랜트·선박 조기 가동 지원,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지역기업의 신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활성화 뒷받침

③ 규제 체감도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노력 지속

- 주요 경제단체, 협·단체, 기업 간담회 등 민간·현장과 소통하며 규제개선 과제 발굴·개선 노력 지속
 - 대기오염 배출물질 측정방식·인정범위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의 시간·비용부담 완화
 - 화물용 전기자전거·하이브리드 택시 도입 기준 마련 등 기업의 신규사업 추진 기반 마련

Ⅲ. 분야별 규제혁신 과제

◇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바이오·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 산단 등 입지 애로 해소 등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추진

1 액화수소 등 친환경에너지 확산 기반 강화

① 액화수소 플랜트 및 선박생산 관련 시험특례 적용 [현장대기 프로젝트]

- (현황) 액화수소 안전밸브의 극저온 성능시험시 시험 유체로 액화수소·헬륨만 허용 → 국내 성능시험 시설 부재로 액화수소 플랜트 등 구축에 애로

* 미국·유럽은 성능시험 유체로 수소·헬륨보다 끓는점이 높은 질소도 허용
(끓는점: 질소(-196℃) > 수소(-253℃) > 헬륨(-269℃))

- (개선) 국내에 액화수소 유체 성능시험 장치* 구축('25년) 전까지 한시적으로 성능시험 유체로 액화질소 허용

*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한국가스안전공사, 22~25년, 충북 음성군)

[조치사항] 액화수소 '임시 안전기준' 마련(既조치, '23.6월)

※ 1조원 규모로 진행 중인 액화수소 플랜트 투자('21~'23년)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

② 바이오매스 원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대상 확대 [현장대기 프로젝트]

- (현황)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의 CO₂ 배출량을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외*하는 업종이 철강·석유화학으로 한정

* 바이오매스가 성장하면서 대기중 CO₂를 포집·저장후, 원료사용시 이를 다시 방출

- (개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정유업종 추가 추진

[조치사항] '23.4분기까지 전문가 워킹그룹에서 제외 대상업종 확대 타당성 검토

※ 관련 투자의 경제성 제고로 8,000억원 투자의 원활한 이행 지원

③ 철도 인근 부지 수소충전소 설치 안전기준 마련 [현장대기 프로젝트]

- (현황) 철도 인근 30m 내 수소충전설비 설치를 위한 안전성 평가기준이 불명확 → 철도 부지 활용 수소충전 사업 추진 애로
- (개선) 철도 인근 부지 활용 수소충전 실증(~'25.12월)을 통해 안전성 검증 및 철도 인근 부지에 적용되는 별도 안전기준 개발

[조치사항] 실증사업 종료후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개정

※ 부산 등 철도인근 부지내 수소충전설비 투자 500억원 창출 효과

④ 신재생에너지 초과발전량의 시장거래 기준 완화

- (현황) 발전사업자-전기사용자간 전력거래(제3자 PPA: Power Purchase Agreement)시 전기사용자는 발전량 전량을 구매해야 하며, 초과 발전량은 시장판매 불가
- (개선)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거래당사자간 합의로 사용량 한도까지만 구매하고 초과발전량은 시장거래를 허용하는 방안 마련

[조치사항] '23.4분기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개정

⑤ 하이브리드 택시 유형 구분기준 개선

- (현황) 기술 발전으로 하이브리드차의 배기량이 낮아짐에 따라 현행 기준*으로는 고급택시 운영 곤란** → 하이브리드 택시 분류기준의 현행화 필요

* 고급택시 기준: (내연기관)배기량 2800cc이상, (친환경차)배기량 2400cc이상/최대출력 160kW 이상

** (예) 카니발(7인승) 하이브리드차(출시 예정, 2400cc 미만)는 현행 기준에 따르면 중형택시로 운행되나, 동종의 내연기관차(3400cc)는 고급택시로 운행중

- (개선) 내연기관차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하이브리드차 기준 마련*

* (예) 하이브리드 카니발 택시는 내연 카니발 택시와 동일하게 고급택시로 분류

[조치사항] '24.1분기까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개정

2 바이오, 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① 충북 오송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현장대기 프로젝트)

- (현황) 충북 오송에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나, 부지내 농지 포함 등으로 추진에 애로
- (개선) 관계기관 통합조정회의(8.7)를 통해 사업면적(125만평) 및 지구계획을 확정하였으며, 국가산단 계획 승인 등을 거쳐 바이오 융복합 산단*을 신규 조성할 계획

*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타운, 바이오-제약기업 유치 등 K-바이오 스퀘어 사업 추진

[추진일정] '24년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 바이오 기업 등 투자 4조원 + α 창출 효과

② 세종·대전시내 드론 비행구역 확대 (현장대기 프로젝트)

- (현황) 美 9.11 테러 이후 원전주변을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였으나, 금지구역이 광범위*하여 민간 드론개발 산업에 제약

* 원전주변 비행금지 구역: (韓) 반경 19km / (美.英 등): 반경 5km

- (개선) 낮은 원전 출력* 등을 감안하여, 대전시 한국원자력연구소 주변 비행금지구역의 범위를 항공선진국 수준(5km 내외)을 고려하여 조정

*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열출력은 30MW으로 일반 원자력 발전소의 약 100분의 1 수준(원자로에 사용되는 핵연료 양이 적음)

[조치사항] '24년내 '항공정보간행물' 개정

※ 드론배송서비스 기업 투자 40억원 창출 효과

③ 드론 특별비행 승인절차 간소화

- (현황) 드론의 특별비행승인*은 최대 6개월마다 갱신 필요 → 적기 비행 곤란 및 절차비용 발생

* 야간 또는 비가시권 비행시 사전 안전검사 등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

- (개선) 승인신청 내용이 이미 승인받은 비행계획과 동일한 경우 안전검사를 생략*(1회 한정)하여 승인기간을 신속하게 연장

* 연장 신청시 안전검사 생략으로 승인처리기간이 30일 → 5일로 단축

[조치사항]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 기준」 개정('23.6월)

4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지원

- (현황) 현행 자전거법상 전기자전거*는 무게 30kg 미만, 폭 700mm 이내 등으로 규제**되어 화물용 자전거의 활용 제한

* 현행 제도상 전기자전거는 일반용과 화물용 미구분 / 무게·폭 제한으로 화물용 활용 곤란

** 국가별 중량 제한: (독일) 300kg (프랑스) 650kg (美·英·日·캐나다) 제한없음

- (개선)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세부 안전기준(중량·폭·속도 등)을 실증사업('23.4~'25.12월)을 거쳐 마련

[조치사항] '24.3분기까지 「자전거법」 등 관련 법률과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고시」 등 개정

5 건설기계 안전기준 개선

- (현황) 최신 기술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 국제표준과의 부조화** 등 일부 안전기준 미흡으로 신기술 도입 및 건설기계 제작에 애로

* (예) 후사경 외 영상확인장치 등 간접시계장치가 도입되고 있으나 안전기준 부재

** (예) 건설기계 번호판 밝기 기준이 국제표준은 조도이나 국내기준은 휘도 기준

- (개선) 신기술 도입 촉진 및 제작애로 해소를 위해 안전기준 개정

* 안전기준 개정 수요조사('23.8) → 전문가 검토('23.10) → 안전기준 개정('24.3)

[조치사항] '24.1분기까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6 위치정보법 내 과도한 벌칙규정 제재 개선

- (현황) 개인위치정보에 비해 유·노출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사물위치정보의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형벌을 규정

- (개선)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제재규정 전환

< 위치정보법 벌칙규정 개정(안) >

위법행위/위법행위자	제재규정	
	현 행	개 정
사물위치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매출액 3/100이하 과징금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물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신고를 한 자		폐지 ※ 변경신고 사항을 '위치정보 시스템'에서 '위치정보 사업의 종류'로 변경
사물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조치사항] '23.4분기까지 「위치정보법」 개정안 발의

3 산단 등 입지규제 개선

① 일반산단 부지공급 수의계약 허용범위 확대(현장대기 프로젝트)

- (현황) 일반산단 지정권자(광역지자체+인구 50만명이상 기초지자체)와 입주협약을 맺은 기업에게만 수의계약을 통한 산단부지 공급 가능
 - (개선) 기초지자체가 산단 사업시행자인 경우, 기초지자체와 입주협약을 맺은 기업에게도 부지공급 수의계약 허용*
- * 기초지자체가 지정권자와 개발계획과의 적합성(해당기업과 유치업종 배치계획·토지이용계획·주요기반 시설계획 등과의 적합성)에 대한 협의를 거쳐 부지공급

[조치사항] '24.1분기까지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

※ 투자 1.3조원, 매출 3.7조원, 고용 5,000명 창출 효과

② 곤충 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현장대기 프로젝트)

- (현황) 곤충 가공·유통업과 달리 생산업은 축산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 입주 불가 → 곤충산업 분리 운영으로 비효율* 초래
- * 산단 내외 중복투자로 기업부담 가중 및 가격 경쟁력 저하, 국토 난개발 문제
- (개선) 곤충가공업의 원재료로써 곤충을 생산하는 경우, 곤충가공업의 부대시설로 보아 산업단지 입주 허용

[조치사항] '23.4분기까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

※ 곤충가공업 원재료 생산시설 투자 200억원, 매출 1,100억원, 고용 200명 창출 효과

4 기술인력 채용, 신고·등록 등 관련 기업부담 완화

① 가축분뇨처리업 의무고용 기술인력 기준 완화

- (현황)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 기술인력* 의무고용 (3명) 필요

* 수질환경·화공·컴퓨터응용 가공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유자 등

- (개선) 가축분뇨 처리시설 전문업체와 처리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술인력 의무 고용 면제

[조치사항] '23.4분기까지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

②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 (현황)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이 말소('26.4월)될 예정으로 중소 기업의 인력채용 부담 및 기존 유지관리 담당자의 고용불안 발생

* 「기계설비법」시행('20.4)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었으며, 법 시행 이전부터 同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임시유지관리자 자격 부여(~'26.4)

- (개선) 임시유지관리자가 실무경력 확보, 교육이수 등을 통해 초급¹⁾ 또는 보조²⁾ 유지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완화

1) (선임대상) 연면적 1만㎡ 미만인 건축물 또는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2) (선임대상) 특급·고급 책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연면적 3만㎡ 또는 2천세대 이상)

[조치사항] '24.1분기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③ 케이블TV, 위성방송사업 허가심사 간소화

- (현황) 케이블TV·위성방송사업(Skylife) 허가시 유사중복 절차 (과기부 허가심사, 방통위 사전동의) 이행으로 사업자 부담 가중

- (개선) 심사절차를 실질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

* (예시) 과기부의 허가 심사위와 방통위의 사전동의 심사위를 통합하여 공동 운영

[조치사항] '23.4분기까지 유료방송 허가심사 절차 개선방안 마련

4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

- (현황) 투자자회사 등에 대한 임원겸임은 기업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희박함에도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대상으로 규정

* 현재 임원겸임보다 비교적 결합의 강도가 높은 ①주식취득, ②회사설립에 따른 기업결합의 경우에도 신고의무 면제

- (개선) 투자회사 등에 대한 임원겸임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

[조치사항] '24.1분기까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

5 신규 도입 항공기의 신속한 운항을 위한 절차 개선

- (현황) 항공기 신규 도입시, 감항증명서 발급* 후 운영기준(D085)에 항공기를 등록하여야 투입이 가능하여 비행 지연(최대 18일)

*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음(감항성)을 증명하는 인증서(항공안전법)

** 항공기 도입 → 감항증명서 발급(2~3일) → 운영기준 등록(최대 15일) → 비행

- (개선) 항공기 도입 후 2~3일 내에 비행이 가능하도록 감항 증명서 발급 전 운영기준(D085) 등록을 허용

* 운영기준 등록(최대 15일 감항증명 조건부) → 항공기 도입 → 감항증명서 발급(2~3일) → 비행

[조치사항] 항공사 안전운항체계 유지 점검 등 항공안전감독 활동(수시)

6 항공기 등 정비위탁사 관련 목록 변경 신청 절차 개선

- (현황) 항공기 정비 등을 수행하는 운항정비확인업체는 국토부의 정비조직인증을 보유하여 관리되고 있음에도, 운영기준(D091)에 의해 중복 관리되어 필요시* 매번 운영기준 변경신청을 수행

* 신규 위탁사 추가, 기존 위탁사 계약범위 변경 등

- (개선) 운영기준(D091)에서 운항정비확인업체 목록을 삭제하고, 해당 목록을 항공사가 자체 관리하는 절차 마련

* 항공사의 상시 안전감독활동을 통해 해당 목록의 현황은 지속 확인 가능

[조치사항] '24.1분기까지 항공사 운영기준, 정비규정 개정 지도

7 비산 배출시설 총유기탄소(TOC) 측정방식 개선

- (현황) ① 비산(飛散) 배출시설*의 총유기탄소(TOC)** 배출농도 측정시 냉각탑과 연결된 각각의 열교환기마다 시료 채취 → 열교환기가 다수인 경우 사업자 부담 증가

* 굴뚝 등의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

** 물속에 포함된 전체 탄소량으로 수질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② 비산 배출시설의 TOC 배출농도 자체측정시 측정장비 정도검사* 성적서 제출이 필요하나, 측정장비중 TOC 분석기기는 정도검사 성적서 제출이 불가능**

* 환경측정기기의 정확성을 주기적으로 검사

** 정도검사 성적서는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형식승인 기기만 발급받을 수 있는데, TOC 분석기기는 형식승인 기기가 아니므로 성적서 발급 대상이 아님

- (개선) ①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수량에 상관없이 일부 대표 지점*에 대해서만 시료 채취

* 냉각탑에서 열교환기로 유입되는 1개 지점과 냉각탑에서 냉각수가 유출되는 1개 지점

- ② 관련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관리한 경우, 측정기기의 형식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정도검사 성적서 제출 면제 → 사업자의 자체측정값 인정

[조치사항] '23.4분기까지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개정

5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① 카페 등 음식점 내 반려동물 동반 이용 허용

- (현황)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접객업 영업장은 동물 출입이 가능한 공간과 분리하도록 규정하여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 곤란*

* 반려동물은 매장내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 두어야 하며 함께 이용은 불가

- (개선) '23년내 실증대상 확대*를 통해 조기에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가이드 마련 및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운영: (현재) 5개 매장 → (확대) 88개 매장

[조치사항] '24.2분기까지 반려동물 동반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②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기준 명확화

- (현황) 지자체가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장애인 생산시설 품목이 공공기관 규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과 상이*

*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지자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직접생산품목(「지방계약법 시행령」)

- (개선) 지자체도 일반적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명시

[조치사항] '23.4분기까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③ 자동차 자기인증 표시 항목 명확화

- (현황) 자동차제작자의 자기인증표시* 항목 중 타이어의 '공기압' 표시 기준이 최대 공기압인지 적정 공기압인지 불분명

*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스스로 인증하여 표시(「자동차관리법」제30조)

- (개선) 자동차 제작자 및 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압' 항목을 '최대 공기압'으로 명확화

[조치사항] '24.1분기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4 대형 승합택시 군(郡) 지역 도입 허용

- (현황)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는 군 지역에서 면허 발급이 불가하여 군 지역 택시산업 경쟁력 약화

* 대형 승합택시 사업구역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규정되어 있어, 시(市)에서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도(道)에 속한 군에서 운행 가능

- (개선) 군 지역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주민의 이동권 제고를 위하여 군 지역 대형 승합택시 면허 발급 허용

[조치사항] '24.1분기까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5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인감 발급가능 명시

- (현황) 인감증명서 발급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실물 운전면허증 외에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지자체 등 일선 기관에서 실물 면허증만을 인정하는 등 착오 발생

- (개선)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함을 명시

[조치사항] '24.2분기까지 「서명 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개정

6 대학설립자의 교사·교지 소유의무 완화대상지역 확대

- (현황) 택지개발지구·산업지구·혁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대학설립주체가 대학 교사·교지를 소유하도록 규정

* 해당 지역에서는 설립주체가 타인과 공동으로 대학 교사·교지 소유 가능

- (개선) 경제자유구역에도 소유의무 완화 규정 적용(타인과 공동 소유 허용)

[조치사항] '24.4분기까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6

기업 수출현장 애로 해소

- ◇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현장 간담회 및 협단체 협업·방문·전화·온라인 접수 등 다양한 경로로 그간 총 621건의 수출애로를 발굴, 총 464건 해소하여 피드백까지 완료(74.7%)

① 기업의 수출바우처 이용 편의성 제고

- (현황)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및 서비스 외에도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이용편의를 제고할 필요
- (개선) ①수출바우처 지원 서비스에 무역보험·보증 서비스* 추가, ②사용기관 자율 선택 서비스 범위 추가** 및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단기수출보험, 해외채권회수대행 서비스, 환변동 보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등

** (현행) 국제운송·전시회 등 → (개선) 서류대행·현지등록 등으로 확대 추진

[조치사항] 무역보험·보증 서비스 도입 관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개정('23.6월), '23.하반기중 사용기관 자율 선택 서비스 범위 추가 검토

② 정부포상 및 실적증명서 영문화

- (현황) 수출·수주시 해외바이어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부포상 및 건설실적 증명서를 영문으로 제공할 필요
- (개선) ①정부포상 '영문 수여증서' 발급방안을 마련하고, ②국내에서 수행한 건설실적에 대해 영문 실적증명서 표준 마련

[조치사항] '23.하반기중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개정 추진
'23.하반기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③ K-콘텐츠산업 투자 세제지원 확대

- (현황) TV, 영화, OTT, 애니메이션 등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
 - (개선)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추진('24년~)
- * (현행) 대/중견/중소: 3/7/10% → (개편) 대/중견/중소 (기본공제율 상향) 5/10/15%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신설) 10/10/15%

[조치사항] '23년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4 반도체 제조설비 운반기구 등 재수출면세 명시

- (현황) 반도체 제조설비의 물품운반용 기구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수출 면세조항이 부재

* 반도체 제조설비의 포장용품 운송차량은 재수출면세 대상이나, 운반용 카트 등은 규정이 불명확

- (개선) 반도체 제조설비 운반기구 등에 대해 재수출면세 적용

[조치사항] '23년말까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5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절차 개선

- (현황) 의료기기 일부 원자재·공정 변경시 현재는 신제품 출시에 준하는 허가절차 필요

- (개선) ISO 등의 최신 국제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생물학적 안전 평가보고서' 인정 범위 확대*

* (현행) 변경된 원자재 및 공정 관련 '생물학적 시험성적서' 제출 →
(개선) 국제적으로 인정된 '생물학적 안전 평가보고서' 제출 등도 허용

[조치사항] '23년말까지 「의료기기 허가·심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6 수출목적 수입품의 수입요건 확인절차 개선

- (현황) 원상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통관시 수입요건 확인절차 간소화 필요

- (개선) 수입 당시 원상태 수출신고만으로 전파법 관련 수입요건 적용 면제 및 전안법 관련 수입요건 면제 온라인 신청 절차 마련*

* (현행) 기업이 관할 지자체 요건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세관 제출 필요 →
(개선) 수입 당시 관세청에 원상태 수출신고로 전파법상 수입요건 적용 면제 및 지자체 발급 시스템과 '정부 24'를 연계하여 온라인 신청·발급

[조치사항] '23년말까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등 추진

IV. 향후 계획

□ 범부처 합동으로 강력한 규제혁신 노력 지속

- 범부처 협의체인 경제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원스톱 수출 수주지원단, 신성장 전략기획추진단, 부동산 PF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수출·투자 현장애로를 전방위 해소 추진
- 주요 업종별 간담회, 기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 발굴·개선 추진

⇒ 규제혁신·애로해소 성과물은 규제혁신전략회의, 경제 규제 혁신 TF(매월 개최) 등을 통해 발표

참고 1

과제별 추진 계획

번호	정책과제	일정	부처
1-1	액화수소 플랜트 및 선박생산 관련 시험특례 적용 (액화수소 '임시 안전기준' 마련)	기초치	산업부
1-2	바이오매스 원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대상 확대 (전문가 워킹그룹에서 제외 대상업종 확대 타당성 검토)	'23.4분기	환경부
1-3	철도 인근 부지 수소충전소 설치 안전기준 마련 (실증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개정)	'26.2분기	산업부
1-4	신재생에너지 초과발전량의 시장거래 기준 완화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개정)	'23.4분기	산업부
1-5	하이브리드 택시 유형 구분기준 개선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개정)	'24.1분기	국토부
2-1	충북 오송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24년	국토부
2-2	세종·대전시내 드론 비행구역 확대 (「항공정보간행물」 개정)	'24.4분기	국토부
2-3	드론 특별비행 승인절차 간소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 기준」 개정)	기초치	국토부
2-4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지원 (「자전거법」 등 관련법률과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고시' 등 개정)	'24.3분기	행안부 산업부
2-5	건설기계 안전기준 개선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4.1분기	국토부
2-6	위치정보법 내 과도한 벌칙규정 제재 개선 (「위치정보법」 개정안 발의)	'23.4분기	방통위
3-1	일반산단 부지공급 수의계약 허용범위 확대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	'24.1분기	국토부
3-2	곤충 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	'23.4분기	산업부

번호	정책과제	일정	부처
4-1	가축분뇨처리업 의무고용 기술인력 기준 완화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	'23.4분기	환경부
4-2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24.1분기	국토부
4-3	케이블TV, 위성방송사업 허가심사 간소화 (유료방송 허가심사 절차 개선방안 마련)	'23.4분기	과기부 방통위
4-4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	'24.1분기	공정위
4-5	신규 도입 항공기의 신속한 운항을 위한 절차 개선 (항공사 안전운항체계 유지 점검 등 항공안전감독)	수시	국토부
4-6	항공기 등 정비위탁사 관련 목록 변경 신청 절차 개선 (항공사 운영기준, 정비규정 개정 지도)	'24.1분기	국토부
4-7	비산 배출시설 총유기탄소(TOC) 측정방식 개선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개정)	'23.4분기	환경부
5-1	카페 등 음식점 내 반려동물 동반 이용 허용 (반려동물 동반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24.2분기	식약처
5-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기준 명확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23.4분기	행안부
5-3	자동차 자기인증 표시 항목 명확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4.1분기	국토부
5-4	대형 승합택시 군(郡) 지역 도입 허용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24.1분기	국토부
5-5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인감 발급가능 명시 (「서명 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개정)	'24.2분기	행안부
5-6	대학설립자의 교사·교지 소유의무 완화대상지역 확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24.4분기	교육부

번호	정책과제	일정	부처
6-1	기업의 수출바우처 이용 편의성 제고 (사용기관 자율 선택 서비스 범위 추가 검토)	'23.4분기	산업부 중기부
6-2	정부포상 및 실적증명서 영문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개정)	'23.4분기	행안부 국토부
6-3	K-콘텐츠산업 투자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3.4분기	기재부
6-4	반도체 제조설비 운반기구 등 재수출면세 명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23.4분기	기재부
6-5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절차 개선 (「의료기기 허가·심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3.4분기	식약처
6-6	수출목적 수입품의 수입요건 확인절차 개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23.4분기	과기부 산업부

참고 2

과제별 부처 담당자

과제명		부처명	담당과장	담 당
1-1	액화수소 플랜트 및 선박생산 관련 시험특례 적용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황윤길 과장 044-203-3980	박경민 사무관 044-203-3985
1-2	바이오매스 원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대상 확대	환경부 기후경제과	전 완 과장 044-201-6580	정상필 사무관 044-201-6595
1-3	철도 인근 부지 수소충전소 설치 안전기준 마련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황윤길 과장 044-203-3980	박경민 사무관 044-203-3985
1-4	신재생에너지 초과발전량의 시장거래 기준 완화	산업부 전력시장과	강경택 과장 044-203-3910	전두영 사무관 044-203-3912
1-5	하이브리드 택시 유형 구분기준 개선	국토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윤성배 과장 044-201-3823	장상준 사무관 044-201-4756
2-1	충북 오송 바이오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기용 과장 044-201-3674	신경창 사무관 044-201-3700
2-2	세종·대전 시내 드론 비행구역 확대	국토부 항공교통과	곽영필 과장 044-201-4294	정혜인 사무관 044-201-4303
2-3	드론 특별비행 승인절차 간소화	국토부 첨단항공과	김동현 과장 044-201-4307	백병성 사무관 044-201-4315
2-4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지원	산업부 생활여러제품안전과	오재철 과장 043-870-5450	김대한 연구사 043-870-5451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	신일철 과장 044-205-3531	이미현 사무관 044-205-3532

과제명		부처명	담당과장	담 당
2-5	건설기계 안전기준 개선	국토부 건설산업과	우정훈 과장 044-201-3538	박문신 사무관 044-201-3537
2-6	위치정보법 내 과도한 벌칙규정 제재 개선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	박명진 과장 02-2110-1520	성재식 사무관 02-2110-1521
3-1	일반산단 부지공급 수의계약 허용범위 확대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기용 과장 044-201-3674	조계환 사무관 044-201-3677
3-2	곤충 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산업부 입지총괄과	이영호 과장 044-203-4430	안근영 사무관 044-203-4409
4-1	가축분뇨처리업 의무고용 기술인력 기준 완화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박판규 과장 044-201-7060	천지은 사무관 044-201-7079
4-2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국토부 건설산업과	우정훈 과장 044-201-3538	이종문 사무관 044-201-4585
4-3	케이블TV, 위성방송사업 허가심사 간소화	과기부 뉴미디어정책과	이기선 과장 044-202-6540	안제성 사무관 044-202-6544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	신승한 과장 02-2110-1430	양완석 사무관 02-2110-1439
4-4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	공정위 기업집단결합정책과	이병건 과장 044-200-4932	안석우 사무관 044-200-4934
4-5	신규 도입 항공기의 신속한 운항을 위한 절차 개선	국토부 항공운항과	민풍식 과장 044-201-4259	이금아 사무관 044-201-4323
4-6	항공기 등 정비위탁사 관련 목록 변경 신청 절차 개선	국토부 항공운항과	민풍식 과장 044-201-4259	이금아 사무관 044-201-4323
4-7	비산 배출시설 총유기탄소(TOC) 측정방식 개선	환경부 대기관리과	박정철 과장 044-201-6900	강택신 사무관 044-201-6914

과제명		부처명	담당과장	담 당
5-1	카페 등 음식점 내 반려동물 동반 이용 허용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최대원 과장 043-719-2010	박진국 사무관 043-719-2011
5-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기준 명확화	행안부 회계제도과	김수경 과장 044-205-3771	양현진 사무관 044-205-3781
5-3	자동차 자기인증 표시 항목 명확화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김은정 과장 044-201-3817	심형석 사무관 044-201-3840
5-4	대형 승합택시 군(郡) 지역 도입 허용	국토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윤성배 과장 044-201-3823	장상준 사무관 044-201-4755
5-5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인감 발급가능 명시	행안부 주민과	조상언 과장 044-205-3141	유미경 사무관 044-205-3151
5-6	대학설립자의 교사·교지 소유의무 완화대상지역 확대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최용하 과장 044-203-6950	류승의 사무관 044-203-6961
6-1	기업의 수출바우처 이용 편의성 제고	산업부 무역진흥과	박재정 과장 044-203-4030	장지혜 사무관 044-203-4017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과	김봉덕 과장 044-204-7500	배주형 사무관 044-204-7509
6-2	정부포상 및 실적증명서 영문화	행안부 상훈담당관	하민상 과장 02-2100-4090	박동민 사무관 02-2100-4092
		국토부 건설정책과	장우철 과장 044-201-3504	유연형 사무관 044-201-3558
6-3	K-콘텐츠산업 투자 세제지원 확대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	양순필 과장 044-215-4130	서주원 사무관 044-215-4133
6-4	반도체 제조설비 운반기구 등 재수출면세 명시	기재부 관세제도과	김영민 과장 044-215-4410	박상현 사무관 044-215-4412
6-5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정성 평가절차 개선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주선태 과장 043-719-3752	이정애 사무관 043-719-3754
6-6	수출목적 수입품의 수입요건 확인절차 개선	전파연구원 정보통신융합성평가과	신흥순 과장 061-338-4700	양준규 연구관 061-338-4710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이응로 과장 043-870-5440	기현종 연구관 043-870-5442